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분석

강원택 | 숭실대학교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그 이전인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매우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하락해 온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하락폭도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라는 잇단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거나 불참한 유권자들을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불참을 기준으로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두 차례의 선거에 모두 불참한 이들은 제도적 방식에 의한 정치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 이들인지 주목했다.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자체에 대해서 유독 강한 회의감을 갖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선거라는 경쟁 메커니즘이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정치적 불만과,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등 공식적 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이들을 기권으로 이끌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대선에서는 투표했지만 총선에는 기권한 유권자들은 상황적 요인이나 후보자 요인보다 정당 일체감, 정당정치의 평가, 이념적 거리감 등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이들의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2008년 총선 투표율은 46.1%로 최종 집계되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최초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4개월 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63%를 기록하여 대통령 선거 사상 역시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낮은 투표율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하락해 온 추세가 계속 이어진 것이며 그 하락폭이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제인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이처럼 크게 낮아지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물론 투표율 하락의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투표율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지닌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된 기간은 불과 20년에 불과하다. 더욱이 20년 전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낸 구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다. 소위 ‘체육관 선거’ 대신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민주화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선거 참여에 대한 열망은 이처럼 크게 퇴색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7년과 2008년 연이은 선거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권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거나 혹은 민주주의 가치 자체에 회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아닌지에 주목한다. 만일 선거 불참자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에 회의를 갖게 된 이들이라면 기권율의 증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권자는 2008년 총선에서 투표에 불참한 이들이지만, 앞선 대선과 연계해서 고려할 때 이들 기권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두 차례 모두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들의 집단이다. 또 다른 집단은 앞선 2007년의 대통령 선

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4개월 뒤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들이다. 현상적으로 이들은 모두 2008년 총선에서 기권한 이들이지만 그 속성은 다를 것으로 이 글에서는 간주한다. 전자가 보다 소극적이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불만이 강하다면, 후자는 단기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에서의 가정이다. 이러한 기권자 집단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대선과 총선 두 번의 선거에 모두 투표한 적극적 참여자 집단과의 대비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한국선거학회가 2008년 총선 이후 조사한 서베이 자료이다.

II. 투표 참여와 기권

정치 현상 가운데 여전히 일목요연하고 명쾌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투표 불참, 혹은 기권의 원인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투표 참여 혹은 불참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져 왔지만 ‘보편적이고 명쾌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만큼 수많은 원인이 기권이라는 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치학 연구에서는 사실 그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선거 불참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그 중 한 접근법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한 설명방식이다. 이의 대표적인 학자인 다운즈(Downs 1957)는 투표 참여의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효용을 고려하여 투표 참여/불참의 결정을 설명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로 인한 효용이 참여의 비용을 능가하게 되는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너무 작기 때문에 전체 효용은 음수가 되고 이 논리대로라면 누구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라이커와 오드슈(Riker and Ordeshook 1968: 28)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다운즈의 투표 참여 모델을 수정하면서 전체 효용함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한 별도의 가치를 추가했다. 투표 승자 결정 이외에도 투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전통에 부응했다는 투표 행위의 도덕적 만족감,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보였다는 데서 비롯되는 만족감,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했다는 만족감, 투표장에 다녀왔다는 만족감, 정치체제 속에서 효능감을 확인했다는 만족감 등이 승자결정에서 비롯되는 효용 이외에도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다운즈가 말하는 효용이 도구적 효용 (instrumental utility)이라면, 라이커와 오드슈이 제시한 효용은 표출적, 혹은 표현적 효용(expressive utility)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가치를 한 함수식에 포함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운즈나 라이커-오드슈의 주장은 여전히 유용한 접근법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선거 분석을 예로 들면, 김재한(1993)은 다운즈의 이론을 따라 14대 대통령 선거의 분석을 통해 선거구의 경쟁이 치열하여 유권자의 한 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투표율이 증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운즈의 주장대로 최종적 결정자 (a pivotal voter)의 역할은 아닐지라도 선거 경쟁의 가열이 한 표의 효용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기여라는 점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조성대 (2006)는 17대 총선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투표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달리 투표 참여 문제를 사회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연구한 결과도 적지 않다. 미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는 고학력, 고소득, 고연령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olfinger and Rosenston 1980; Burnham 1980; Rosenston and Hansen 1993). 영국에서도 계급별, 소득별 차이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Swaddle and Heath 1992), 최근에는 투표 참여의 성별, 지역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Norris 1999; Johnston, Jones, Pro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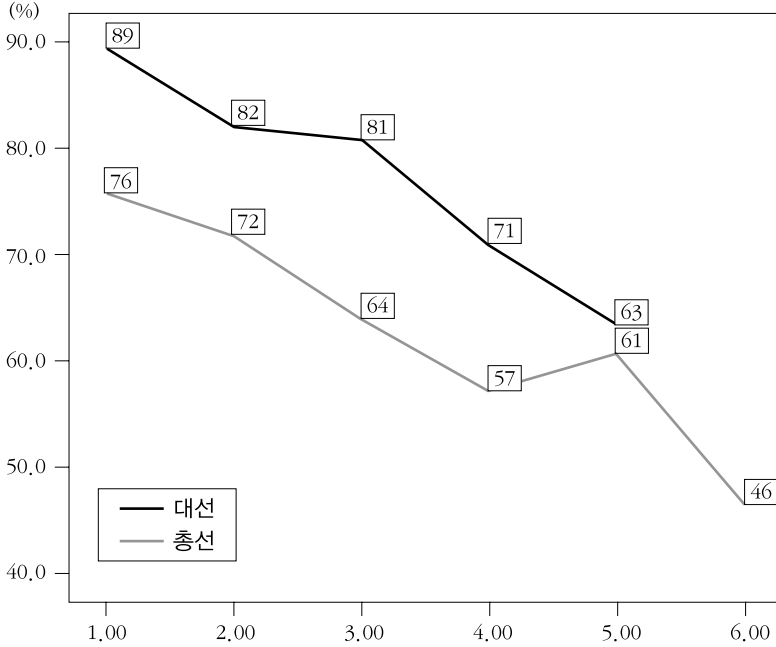
and Burgess 2007). 연령 변수는 영국에서도 투표율에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Crewe et al. 1992).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투표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사회경제적 변인은 연령이다. 젊은 층일수록 투표율이 낮으며 나이가 든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박찬욱 1992; 김재한 1993; 김욱 199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투표 참여의 영향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입장이 갈린다. 일반적으로는 서구에서와는 달리 교육 수준이 높으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교육 요인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김욱 (1998)은 교육 수준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가 확인되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 정도에 따른 투표 참여의 차이도 중요한 변인 중 하나였다. 이는 과거 관권이나 정당에 의한 동원 투표의 효과로 설명되었다. 황아란 (1996)은 15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골일수록 투표 참여의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김욱 (1999)은 농촌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받는 동원 압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찬욱 (1992)은 동원이나 교차압력보다 도시화가 투표 참여를 높이는데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투표 참여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접근법은 정치적 효용감이나 정치적 일체감, 정당 소속감 등 정치적 요인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다. 미국 선거 분석을 통해 샤퍼 (Shaffer 1981)나 에이브람슨과 알드리치 (Abramson and Aldrich 1982) 등은 정치적 효용감의 감소, 정당 소속감의 약화가 투표율의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도 투표 참여율의 하락은 당원 수의 감소에서 나타나듯이 정당 소속감 및 충성심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rewe et al. 1992).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지 정당 혹은 후보의 선호도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김재한 1993; 조성대 2006)가 제시되었다. 또한 정치적 지지의 이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강한 연계를 갖던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투표 불참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강원택 2002)도 있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투표 참여 혹은 기권을 설명하는 세 가지 시각은 각기 그 나름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율은 <그림 1>에서

〈그림 1〉 민주화 이후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



보듯이 1987년 대선, 1988년 총선을 정점으로 해서 이후 꾸준히 급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 불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넘어서 시계열적인 변화의 추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현상에 대한 단면적인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보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인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서 기권의 이유와 기권자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연속한 두 선거, 즉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III. 누가 기권했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 여부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두 네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즉 ① 대선 투표-총선 투표, ② 대선 투표 - 총선 기권, ③ 대선 기권 - 총선 투표, ④ 대선 기권 - 총선 기권 등의 네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네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두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불과 4개월의 차이지만 투표 참여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겨났다. 공식 투표율은 대선에 비해 총선에서 17% 가량 낮아졌는데, <표 1>의 결과를 보면 앞선 대선에서의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 비율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 참여한 집단 가운데서는 28%가 4개월 뒤 실시된 총선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2007년 대선에서 기권한 유권자 가운데서는 대선 투표자 집단에 비해 두 배가 넘는 66.9%가 총선에서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총선에 기권한 유권자들이라고 해도 이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2008년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집단을 서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1) 대통령 선거 때 참여한 유권자들이 4개월 뒤의 총선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와, 2)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 투표에 불참한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표 1>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 변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나?		
	구분	투표	기권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했나?	투표	72.0	33.1
	기권	28.0	66.9
	n	100,0 (808)	100,0 (178)

자료: 한국선거학회 (2008)에서 계산.

〈표 2〉 2007년 대선 투표와 2008년 총선 투표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		총선 선택	구분						평균
			-29	30-39	40-49	50-59	60+		
연령	대선 투표		-29	30-39	40-49	50-59	60+		
		투표	53.1	68.9	72.4	84.6	82.3		72.0
		기권	46.9	31.1	27.6	15.4	17.7		28.0
		n	143	183	199	136	147		808
	대선 기권	투표	39.4	20.0	43.5	29.4	31.3		33.1
		기권	60.6	80.0	56.5	70.6	68.8		66.9
n		66	40	23	17	32		178	
지역	대선 투표		서울	경기	충청	호남	경북	경남	평균
		투표	69.3	73.0	76.9	70.1	72.7	71.8	71.8
		기권	30.7	27.0	23.1	29.9	27.3	28.2	28.2
		n	179	259	78	87	88	117	808
	대선 기권	투표	37.9	32.3	45.5	16.7	45.5	26.2	33.1
		기권	62.1	67.7	54.5	83.3	54.5	73.8	66.9
n		29	62	22	12	11	42	178	
소득	대선 투표			하	중하	중상	상		평균
		투표		75.7	75.7	71.1	68.2		72.2
		기권		24.3	24.3	28.9	31.8		27.8
		n		111	177	190	201		679
	대선 기권	투표		35.3	18.2	28.6	48.6		32.8
		기권		64.7	81.8	71.4	51.4		67.2
n			34	33	35	35		137	
학력	대선 투표		중졸 이하		고졸		대제 이상		평균
		투표	76.3		74.9		61.2		72.3
		기권	23.1		25.1		38.8		27.7
		n	147		259		121		527
	대선 기권	투표	20.8		38.6		41.2		36.1
		기권	79.2		61.4		58.8		63.9
n		24		44		51		119	
성별	대선 투표		남성			여성			
		투표	73.9			70.3			72.0
		기권	26.1			29.7			28.0
		n	394			414			808
	대선 기권	투표	34.1			32.2			33.1
		기권	65.9			67.8			66.9
n		88			90			178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 참여 여부에 따른 네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에서는 연령, 지역, 소득, 학력, 성별 등 다섯 개의 변인에 의해 네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네 집단 간 사회경제적 변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총선 기권자 가운데 ‘대선에서 투표하고 총선에서 기권한 집단’과 ‘두 선거 모두 계속해서 기권한 집단’ 간에 사회경제적 변인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뚜렷이 나타났다.

첫째, 연령별로 보면 대선에서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총선에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기권자의 비율은 낮아졌다. 대선 투표자 집단에서는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연령집단에서 그 비율은 46.9%에 달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기권한 집단을 놓고 보면 이와 유사한 패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중에서는 30대에서 가장 높은 기권 비율이 나타났지만, 대선에서 투표한 집단과는 달리 50대, 60대 이상 등 고연령층 유권자 집단의 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지역별로도 차이가 확인된다. 대선에서 투표한 집단 중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총선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호남 지역 유권자의 기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청지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선에서 기권한 집단에서는 호남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총선 기권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충청 지역과 대구 지역에서 총선 기권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많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점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세 번째, 소득별 구분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대선에서 투표한 집단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선에서의 기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기권한 집단에서는 그러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에서 기권한 집단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중간 소득 계층에서의 기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네 번째 학력별 구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대선 때 투표한 집단에

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총선에서 기권한 이들의 비율이 증대했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기권의 비율이 23.1%인데 비해 대재 이상 집단에서 그 비율은 38.8%였다. 그러나 대선에서 기권한 집단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총선 기권자의 비율은 무려 79.2%인데 비해 대재 이상 집단에서 그 비율은 58.8%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 집단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의 비율이 높아졌고 학력이 낮을수록 기권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두 집단 간 패턴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의한 구분에서는 앞서 살펴본 다른 변인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집단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선에서 투표한 집단이나 기권 집단 모두 성별과 무관하게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 비율은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표 2〉에서의 분석 결과, 2008년 총선에서 기권한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투표한 집단’과 ‘대선과 총선 모두 계속해서 기권한 집단’은 서로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별 변수를 제외하면 두 집단 간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요약해 보면, 대선에서 투표한 집단 가운데 총선에서 기권한 이들은 고학력, 서울(그리고 호남), 20-30대, 고소득 계층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비해 두 선거에서 모두 계속해서 기권한 집단은 저학력, 50-60대 고연령층(그리고 30대), 중간소득층, 호남과 경남 지역 유권자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선에서 투표하고 총선에서 기권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속성, 즉 젊은층, 고학력층, 고소득층, 서울, 호남 거주자들은 대체로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하고 현실 문제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특성을 지닌 이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이들이 총선에서 기권한 것은 대선 이후 전개된 정치 상황에서 생겨난 정치적 불만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기권한 집단에서 이런 원인을 추정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들 집단 간 투표 불참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차례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네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표 3〉은 정당에 대한 친근감 혹은 일체감, 그리고 정치적 연계감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표 3〉 정당에 대한 호감도, 대표성에 대한 평가

구분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택				
		대선 투표 - 총선 투표	대선 투표 - 총선 기권	대선 기권 - 총선 투표	대선 기권 - 총선 기권	
가깝게 느끼는 정당	있다	72.5	53.1	58.6	38.7	$\chi^2 = 58.3$ $p < 0.00$
	없다	27.5	46.9	41.4	61.3	
	N	560	213	58	106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	있다	47.3	29.2	33.3	13.7	$\chi^2 = 49.1$ $p < 0.00$
	없다	52.7	70.8	66.7	86.3	
	N	509	195	48	95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네 집단별로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장 적극적인 참여층, 즉 대선투표-총선투표 집단에서는 72.5%가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서 가장 참여에 소극적인 ‘대선 기권 - 총선 기권’에서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오히려 61.3%에 달했다. 대선, 총선 가운데 한 번이라도 투표에 참여한 집단은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두 차례 투표에 참여한 적극 참여층과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정치 불참 집단의 중간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은 두 차례 모두 투표한 집단에서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두 번 다 불참한 집단에서는 13.7%에 불과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한 번 투표에 참여한 두 집단은 그 중간 정도인 30% 내외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3〉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나 소속감, 친근감을 갖는 경우에 투표 참여가 증대하며, 기존 정당과의 연계가 약할 때 기권자가 커지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정당 소속감의 감소가 투표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 (예컨대 Abramson and Aldrich 1982; Crewe et al., 1992) 결과를 재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에서도 김진하 (2008)는 2007년 대선 분석을 통해 정당 귀속감이 부분적으로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표 3〉은 선거라는 정치 행사에 불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당 정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

〈표 4〉 투표 참여 여부에 의한 네 집단의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

변인	대선, 총선 정치 참여 구분				ANOVA
	대선투표 - 총선 투표	대선투표 - 총선 기권	대선거권 - 총선 투표	대선 기권 - 총선 기권	
정당 정치 만족도	2.12	1.92	1.98	1.84	F=7.1 p<0.00
정치인 역할 만족도	1.87	1.70	1.82	1.65	F=4.4 p<0.00
주요 정당 호감도	5.05	4.75	4.57	4.57	F=4.8 p<0.00
정당 일체감 강도	1.92	2.17	2.22	2.22	F=10.3 p<0.00

자료: 한국선거학회(2008)로부터 산출

- 정당정치 만족도, 정치인 만족도: 1 - 매우 불만족 ... 3- 대체로 만족 ... 5-매우 만족
- 주요정당 호감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호감도의 평균) : 0- 매우 싫어한다 ... 5- 중간 ... 10- 매우 좋아한다
- 정당 일체감의 강도: 1 -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 2- 어느 정도 친근하게 느낀다, 3- 그리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해 주고 있다.

투표 참여와 기권을 가르는 중요한 원인이 정당 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표 3〉에서의 발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선과 총선의 투표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네 집단별로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4〉에서는 ‘정당 정치 만족도’,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주요 정당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정당 일체감의 강도’ 등 네 가지 변인에 대해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는 각 집단별로 일관된 패턴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두 번 다 투표에 참여한 집단에서는 정당 정치나 정치인 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크고,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도 클 뿐만 아니라 정당 일체감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두 차례 모두 기권한 집단에서는 네 가지 변인에 대해서 모두 가장 큰 불만이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정당 정치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정치인 역할에 불만이 크며,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 낮고 정당 일체감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두 번 다 선거에 불참한 이들은 현실 정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알 수 있다. 대선이나 총선 가운데 한 차례만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대체로 이 두 집단의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번에는 이들 네 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적 지식의 정도와 정치적 정보 획득의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보듯이 각 집단별로 정치적 지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투표한 집단에서 정치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 모두 기권한 집단에서 정치적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한 번만 투표에 참여한 집단에서는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매체’를 통한 정치 정보의 획득 빈도에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선, 총선 두 차례의 선거에 모두 참여한 집단은 신문, 방송을 통한 정치적 정보의 획득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총선 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 기권자 집단에서 전통매체를 통한 정치적

<표 5>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정보 획득의 빈도

변인	대선, 총선 정치 참여 구분				ANOVA
	대선투표 - 총선 투표	대선투표 - 총선 기권	대선거권 - 총선 투표	대선 기권 - 총선 기권	
정치적 지식의 정도	1.55	1.62	1.59	1.95	F=9.8 p<0.00
신문, 방송 통한 정치정보 획득 빈도	2.97	2.67	2.52	2.60	F=9.8 p<0.00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 빈도	2.21	2.28	2.31	2.24	F=0.3 p=0.9

자료: 한국선거학회 (2008)에서 산출하였음.

- 정치적 지식의 정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국무총리 이름, 집권당 이름, 대통령 임기) 가운데 1은 세 개 모두 정답, 2는 하나만 틀린 경우, 3 두 개 틀린 경우, 4는 세 개 모두 틀린 경우로 재코딩하였음.

- 신문 방송, 인터넷 통한 정보 획득정도: 1 - 이용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용한다,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4 - 매일 이용한다

〈표 6〉 정치적 의사 표현 위한 행동 여부

		대선투표 - 총선 투표	대선투표 - 총선 기권	대선거권 - 총선 투표	대선거권 - 총선 기권	
정치적 의사 표현 위한 행동 여부	있다	11.2	7.7	7.0	7.0	$\chi^2=3.91$ p=0.27
	없다	88.8	92.3	93.0	93.0	
	N	570	220	57	114	

보 획득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정보의 획득 빈도에 대해서는 네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들 네 집단이 선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은 선거라는 제도적 출구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여 선거 기관자들이 오히려 비인습적이거나 선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제도적 정치 참여를 오히려 선호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표 6〉에 네 집단별로 정치적 의사 표현 위한 행동의 경험이 있는지 그 비율을 정리해 두었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어도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투표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선거에 적극적인 이 집단은 다른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 차례라도 기권했던 집단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행동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국 대선과 총선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정당 정치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으며, 정당 일체감이 강하고, 정치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보 획득에도 관심이 많은 이들이다. 또한 이들은 선거가 아닌 다른 정치적 행동에도 적극적인 편이다. 이에 비해 두 번 다 투표에 불참한 이들은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선거가 국민의사를 대변하다는 데 강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 지식이 적으며 정치적 정보의 습득에도 소홀한 편일뿐만 아니라 선거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총선 중 한 차

〈표 7〉 4년 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

변인	대선, 총선 정치 참여 구분				ANOVA
	대선투표- 총선 투표	대선투표 - 총선 기권	대선거권 - 총선 투표	대선 기권 - 총선 기권	
4년 뒤 한국 경제 예상	1.69	1.79	1.89	1.96	F=5.9 p<0.00

자료: 한국선거학회 (2008)에서 산출

1- 좋아질 것이다. 2- 비슷할 것이다. 3- 나빠질 것이다

레라도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대체로 이들 두 집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두 번 다 투표에 불참한 이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이고 불만이 큰 집단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 모두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로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집단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7〉은 4년 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이다. 사실 4년 뒤의 상황을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얼마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혹은 비관적으로 보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표 7〉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정치와 전혀 무관한 미래의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이지만 그 응답은 앞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두 차례 모두 투표에 참여한 집단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 나타난 반면, 두 번 다 기권한 집단에서는 가장 비관적인 응답이 나왔다. 한 번이라도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이들의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대선과 총선 모두 투표에 불참한 이들은 미래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를 기준으로 구분한 네 집단은 대체로 세 개의 경향으로 나뉘지고 있다. 즉 두 차례 모두 투표에 참여한 적극적 투표 집단과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 집단은 서로 매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선과 총선 중 한 차례만 투표에 참여한 두 집단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 투표 집단과 기권자 집단의 중간

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은 역시 단 한 차례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소속감도 약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이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의 특성은 단순히 특정 선거에서 전반적인 투표율을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과연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두 차례 모두 투표에 참여한 적극적인 참여 집단과 비교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IV. 민주주의 가치와 투표 참여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 참여를 기준으로 구분한 네 집단의 정치적 성향과 현실 정치에 대한 판단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두 차례 모두 투표한 집단과 두 차례 모두 기권한 집단 간에는 매우 뚜렷하고 일관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정치적 불만이 크고 현실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기권자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주목해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과연 현행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가치나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들의 정치적 불만 속에 담겨져 있는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민주적 발전을 이뤄왔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는 투표율의 하락이 혹시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나 불만의 표출이라면 최근 들어 나타나는 투표율의 하락의 건강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매우 위협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을 보다 뚜렷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 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

여한 적극투표 집단과 두 번 모두 투표에 불참한 기권자 집단 등 두 집단만을 대상으로 서로 비교하여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작동, 제도적 기구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은 분류되어 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의미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립변수들을 찾아 분류하고자 하는 변인의 집단을 판별하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여기서의 종속변수는 두 번 다 투표에 참여한 적극투표자 집단 (0)과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 집단 (1)이다. 독립변수로는 세 범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곱 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목적이 투표자 집단과 기권자 집단이 민주주의 가치, 작동방식, 주요 제도적 기구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i) 민주주의의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평가, ii) 선거의 대표성과 효용성에 대한 평가, iii) 주요한 공식적 제도 기관에 대한 평가 등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i) 민주주의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의 측정을 위한 변인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다.

-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상황에 대한 만족도 (민주정치만족도 X1)
- 우리나라 자유, 인권의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자유인권존중 X2)
- '민주주의가 다른 정부형태보다 낫다' 는 주장에 대한 태도 (민주가치수용 X3)

ii) 선거의 대표성과 효용성에 대한 평가의 측정을 위한 변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포함했다.

- 투표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한 태도 (투표미래영향 X4)
- 선거가 유권자 의사를 대변한다는 주장에 대한 태도 (선거의사대변 X5)

iii) 주요한 공식 제도 기관에 대한 평가로는 다음의 두 기관을 포함했다.

- 대통령/행정부에 대한 만족도 (대통령/행정부만족 X6)
- 국회에 대한 만족도 (국회만족도 X7)

이에 따른 판별식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VA = \beta_0 + \beta_1X1 + \beta_2X2 + \beta_3X3 + \beta_4X4 + \beta_5X5 + \beta_6X6 + \beta_7X7$$

(VA는 투표참여여부, β 는 계수)

각 설명변수의 유의성 정도는 윌크스 람다(Wilk's Lambda) 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단계별 (stepwise) 방식을 이용하였다. 두 집단별로 각 변수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집단통계량은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듯이 제시된 모든 변수에서 적극적 투표 집단과 기권자 집단 사이의 평균값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변수에 걸쳐 매우 일관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요 공식 제도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집단 내 변동과 집단 간 변동의 차이를 고려한 판별분석 결과, 7개의 변인 가운데 민주정치 만족도, 자유 인권 존중, 민주 가치 수용 등 세 변인은 통계적 예측 변수에서 제거되었고, 나머지 4개의 변인만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투표자 집단과 기권자 집단을 구분하는 표

<표 8> 집단통계량

	민주 정치 만족도	자유 인권 존중	민주 가치 수용	투표 미래 영향	선거 의사 대변	대통령/ 행정부 만족도	국회 만족도	n
두 번 모두 투표	2.60 (0.67)	2.19 (0.69)	2.03 (0.65)	4.10 (1.19)	2.90 (0.62)	2.47 (0.73)	1.95 (0.76)	471
두 번 모두 기권	2.72 (0.70)	2.37 (0.72)	2.23 (0.75)	3.44 (1.41)	3.14 (0.62)	2.15 (0.72)	1.64 (0.62)	78

- * 민주정치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별로 만족 못함, 4- 전혀 만족 못함
- * 자유 인권 존중: 1- 매우 존중, 2- 약간 존중, 3- 별로 존중되지 않음, 4- 전혀 존중되지 않음
- * 민주 가치 수용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낫다]: 1- 매우 찬성, 2- 대체로 찬성, 3- 대체로 찬성 않음, 4- 전혀 찬성 않음
- * 투표 미래영향: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중간, 5- 매우 중요하다
- * 선거 의사 대변: 1- 매우 잘 대변, 2- 상당히 잘 대변, 3- 별로 잘 대변 못함, 4- 전혀 대변 못함
- * 대통령/행정부 만족도, 국회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대체로 만족, 4- 매우 만족

〈표 9〉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 계수

변수	계수
투표미래영향	0.668
대통령/행정부 만족도	0.380
선거의사대변	-0.331
국회만족도	0.305

〈표 10〉 판별분석의 분류 결과

	예측소속 집단		N	집단중심점 (group centroids)	적중률 (hit ratio)
	투표자 집단	기권자 집단			
투표자 집단	366	133	499	0.11	70.2%
	73.3	26.7	100.0		
기권자 집단	42	46	88	-0.67	
	47.7	52.3	100.0		

준화된 판별계수는 〈표 9〉와 같으며, 판별분석의 유의성을 나타내는 분류 결과는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진입된 네 변수에 의한 두 집단 간 판별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표 10〉에서 보듯이 투표자 집단의 판별력은 7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기권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무작위 배분을 가정할 때의 비율 50%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집단 중심점 역시 부호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적중률도 7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판별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진입된 네 변수에 의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판별분석에서 진입된 네 개의 변인 가운데서는 〈표 9〉에서 보듯이, 투표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이 두 집단을 구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대통령/행정부 만족도, 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데 대한 태도, 그리고 국회 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별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 범주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가치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범주에 포함된 세 변인(X1, X2, X3)은 모두 분석의 타당성 검토 결과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선거의 대표성과 효용성 (X4, X5), 주요 공식 제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X6, X7) 등이 포함되었다. 즉 이 네 변인만이 두 차례 모두 투표한 적극적 투표자 집단과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드러났다.

관별분석의 결과는 두 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기권한 기권자들이, <표 8>에서 본대로 민주주의 가치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 정도에 대해서 투표자 집단보다 만족도나 신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자 집단과 구분될 만큼 강한 수준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나 불만을 갖는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다시 말해 대선과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에 모두 기권했다더라도 이들의 불참이 두 번 다 투표에 참여한 이들과 비교할 때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커다란 회의감을 반영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와 같은 체제의 문제보다는 작동의 방식과 대리인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적극적 참여자와 불참자 집단을 나누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 8>와 <표 9>의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두 번 모두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선거라고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 기제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이며, 대통령/행정부나 국회라는 중요한 제도적 기관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두 차례 모두 기권한 이들은 그 반대로 선거의 효용성과 대표성에 대한 불만, 대통령/행정부와 국회라는 제도적 기관에 대한 불만이 강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즉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과 두 번의 투표에 모두 불참한 이들을 구분 짓는 것은 선거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점과 제도적 기관이 얼마나 신뢰를 받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관별분석의 결과는 두 번 다 투표에 불참한 이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 말해 준다. 이

들이 선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보다는 지역주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선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묻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과, 대통령/행정부의 업무 수행이나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여기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정당 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마련과 같이 이들의 정치적 불신과 좌절감을 해소하게 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대통령, 행정부, 국회 등 공식적인 제도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참의 문제는 다소 심각해 보인다. 이 역시 정치적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대선에 투표한 이들은 왜 총선에서 기권했나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 두 차례 모두 기권한 이들을 대상으로, 두 번 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 다 기권한 이들은 선거 정치와 제도적 기구의 업무 수행이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의 기권자 중에는 4개월 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총선에는 불참한 이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다는 점에서 두 차례 모두 기권한 이들과는, 앞의 분석에서 본대로, 정치적 성향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투표에 불참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거부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대선 이후 벌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혹은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치적 충성심의 강도와 같은 다른 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이들의 불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택(2008)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찍은 유권

자들이 4개월 뒤의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찍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이는 인수위원회 시절과 이명박 정부 첫 각료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태와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과 같은 단기적인 이슈의 영향과 함께, 향후 정국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총선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인 유권자의 태도가 지지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즉 앞선 대선에서 투표한 유권자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기권으로 돌아선 데는 상황적인 요인이나 정당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표 11>에서 보듯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0)와 불참한 유권자 (1) 집단이며, 국회의원 선거 전의 정치 상황적 요인과 각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평가, 만족도, 충성심 등 세 개의 범주에 따라 모두 9개의 독립변인을 설정하였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한나라당 공천에 대한 평가, 통합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 세 변인이 포함되었고, 후보자 평가로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지역구 출마 후보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후보자 간 차별성의 정도 등 세 변인을 포함했다. 정당 요인으로는 정당 일체감, 정당체계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주요 두 정당 가운데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과의 이념 거리 등 세 변인을 포함했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 설정한 세 개의 범주 가운데 정당 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상황적 요인이나 후보자 평가의 항목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당 요인에 대한 세 변인에 대해서는 정당 일체감이 강할수록 총선에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은 거의 두 배의 투표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대선에 투표한 이들 가운데 총선에 투표한 이들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과 가장 이념적으로 가깝게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당과의 이념거리가 짧을수록 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과의 이념적 근접성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은 결국 투표 참여 여부가 정당 정치의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앞서서의 분석 결과를 재확인시켜 주

〈표 1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선투표자 중 총선 투표와 총선 기권

구분	변수	B	Exp(B)
상황적 요인	한나라당 공천평가	-0.14	0.87
	통합민주당 공천 평가	0.29	1.33
	이명박 정부 평가	-0.01	0.99
후보자 평가	지역구 후보 만족	0.32	1.37
	의원 의정활동 만족도	-0.28	0.76
	후보자 간 차별성	0.05	1.05
정당 요인	정당 일체감	0.67 ¹	1.96
	정당 호감도*	-0.26 ²	0.77
	이념거리**	0.29 ¹	1.34
상수		-2.62	
-2Log Likelihood = 198.1 Nagekerke R ² = 0.13 분류정확도 81.3%			

자료: 한국선거학회 (2008)에서 산출.

1 - p<0.05, 2 - p<0.1

* 종속변수: 총선투표 (0), 총선 기권 (1)

*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공천평가: 1- 매우 긍정적, 2- 약간 긍정적, 3- 약간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 이명박 정부 평가: 1- 아주 잘하고 있다, 2- 잘하고 있는 편, 3- 못하고 있는 편, 4- 아주 잘못하고 있다

* 지역구 후보 만족: 1- 매우 공감, 2- 대체로 공감, 3- 별로 공감 못함, 4- 전혀 공감 못함.

* 의원 의정활동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별로 만족 못함, 4- 전혀 만족 못함

* 후보자 간 차별성: 1- 큰 차이, 2- 약간 차이, 3- 전혀 차이 없음

* 정당 일체감: 1-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 2- 어느 정도 친근하게 느낀다, 3- 그리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민노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7개 정당의 호오도(싫다 0 ~ 10 좋다)에 대한 평균값

* 이념거리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두 정당 가운데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과의 이념거리

고 있다. 2007년 대선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4개월 뒤인 2008년 총선에 투표한 이들은 정당 정치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인 반면, 기권한 이들은 정당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이었다. 상황적 요인이나 후보자 요인은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인 적합성을 갖지 못했다. 강원택(2008)의 지적대로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자들이 총선에서 다른 정당

지지로 옮겨간 것은 단기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투표 참여의 문제는 그런 단기적인 요인보다 장기적인 정치적 연계, 즉 정당 일체감이나 정당 정치에 대한 호의적 평가, 그리고 이념적 근접성과 같은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지금까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라는 잇단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거나 불참한 유권자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8년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투표 불참자는 대선에 이어 계속해서 기권한 소극적 참여자 집단과, 대선에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총선에서는 불참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그 특성을 각각 살펴보았다.

두 차례의 선거에 모두 불참한 이들은 제도적 방식에 의한 정치 참여에 매우 소극적인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 이들인지 주목했다.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자체에 대해서 유독 강한 회의감을 갖는 이들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선거라는 경쟁 메커니즘이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정치적 불만과,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등 공식적 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이들을 기권으로 이끌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대선에서는 투표했지만 총선에서는 기권한 유권자들은 상황적 요인이나 후보자 요인보다 정당 일체감, 정당 정치의 평가, 이념적 거리감 등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이들의 불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의 발견점을 토대로 본다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의 하락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취약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지역 수준에서는 사실상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이 제

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며, 그로 인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대로 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이 여전히 시민사회 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구로 그 위상을 확립하지 못한 채 정치 지도자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소속감의 약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2008년 총선의 투표율 46.1%는 이제 선거 불참의 수준이 건강한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표장을 등진 유권자들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대중적이고 단기적인 유인책보다는 결국 정당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의 경쟁 메커니즘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참고문헌]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37집 1호, pp.91-111.
- 강원택.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18대 총선: 누가 왜 바꿨나.” 『한국과 국제정치』.
- _____. 2002.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기권과 제 3 당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pp. 153-174.
- 김영태. 2002. “정치적 불만족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pp. 11-57.
- 김 욱.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pp. 205-246.
- _____. 1998. “투표 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pp.199-254.
- 김재한. 1993. “투표 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9, no.1, pp. 89-100.
- 김진하. 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pp.5-31.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 후보 인지 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 14대 총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pp. 153-74.
- 이현우. 1997. “LISREL 기법을 이용한 기권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분석: 15 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국정치학회 9월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 조성대. 2006.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 pp. 51-74.
- 황아란.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pp. 285-98.
- Abramson, Paul, and John Aldrich. 1982. “The Decline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pp. 502-21.
- Ashenfelter, Orley, and Stanley Kelly, Jr. 1982.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esiden-

- tial Elec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pp. 571-608.
- Crewe, Ivor, Tony Fox, and James Alt. 1992. “Non-voting in British general elections, 1966-October 1974.” In D. Denver and G. Hands, eds. *Issues and Controversies in British Electoral Behavior*.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p. 18-30.
- Burnham, Walter. 1980. “The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of the American Voter.” In Richard Rose, ed. *Electoral Participation: A Comparative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p. 35-73.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ow.
- Johnston, Ron, Kelvyn Jones, Carol Propper, and Simon Burgess. 2007. “Region, Local Context, and Voting at the 1997 General Election in Englan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3, pp. 640-54.
- Norris, Pippa. 1999. “Gender: A Gender-Generation Gap?” In G. Evans and P. Norris, eds. *Critical Elections: British Parties and Voters in Long-term Perspectives*. London: Sage, pp. 200-217.
- Riker, William, and Peter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pp.25-43.
- Rosenston, Steven, and John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Shaffer, Stephan. 1981. “A Multivariate Explanation of Decreasing Turnout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pp. 68-95.
- Swaddle, K., and A. Heath. 1002. “Official and reported turnout in the British General Election of 1987.” In D. Denver and G. Hands, eds. *Issues and Controversies in British Electoral Behavior*.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pp. 31-40.
- Timpone, Richard. 1998. “Structure, Behavior, and Voter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pp.145-58.
- Wattenberg, Martin. 2002. *Where Have All the Voters Gon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aymond, and Steven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Low Turnouts in a New Democracy: Analyzing Abstention in the 2007 and 2008 South Korean Elections

Kang, Won-Taek |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some reasons for a continuous trend of low turnouts in South Korean national elections. A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is political phenomenon may be associated with public discontent with the new democratic regime of South Korea. This paper divides four groups according to voting and non-voting in the two recent consecutive elections in 2007 and 2008.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a major reason for non-voting in both elections is related to dissatisfaction with the performances of major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 general. Besides, they also believe that such factors as regionalism make their voting ineffective. Among those who vo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did not turn out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political alienation from political parties made significant impacts on non-voting.

Key Words | abstention, South Korea, 2007 presidential election, 2008 National Assembly Election, non-voting, turnout rate, party identification